

# 남북관계 추진 현황

2004. 9. 30(목)

통 일 부

## 1. 최근 남북관계 상황

- 최근 남북관계는 북측의 당국간 대화 및 일부 민간교류 연기 등으로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 - 김일성 10주기(7.8) 조문 문제, 북한인권법 미 하원 통과(7.21), 대규모 탈북자 입국(7.27-28) 등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
    - \* 해운협력실무접촉(7.13-15),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(8.3-6), 경추위 제10차회의(8.31-9.3) 등 불호응, 8.15 민족공동행사 등 일부 민간 교류 연기
- 그러나 경제협력,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.
  - 개성공단 건설, 철도·도로 연결, 금강산관광, 식량차관 제공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, 일부 민간교류도 금강산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음.
    - \* 이밖에도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(8.13), 용천재해 지원 감사(8.30),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적 등재기념 남북공동행사(9.11~12) 등
- 정부는 화해협력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남북경협과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당국간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입니다.
- 또한 대화 재개시 남북관계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내부역량을 착실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## 2. 북핵문제 해결노력

### □ 추진현황

- 정부는 '02.10 북핵문제 대두 이후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 설득 등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.
  - 3차례 6자회담과 2차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
    - \* 6자회담 : '03.8.27-29(제1차), '04.2.25-28(제2차), '04.6.23-26(제3차)
    - \* 실무그룹회의 : '04.5.12-15(제1차), '04.6.21-22(제2차)
- 특히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·미 모두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, 실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본격적 협상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장성명을 채택
    - ▶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및 이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들(first steps)의 조기 이행 필요
    - ▶ '말 대 말', '행동 대 행동'의 단계적 과정 추진 필요
    - ▶ 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 개최 및 초기 단계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조속히 개최
- 그러나 HEU프로그램 존재 유무 등 주요쟁점에 대한 북·미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.
  - 한·미·일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, 북한이 “모든 핵프로그램”을 국제적 검증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하여야 한다는 입장
  -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포기시, “핵무기 관련 프로그램”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, HEU 프로그램 존재는 부인

- 북한은 제3차 6자회담 직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, 최근 9월중 제4차 회담 개최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.
  - 우리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북한의 태도, 미국의 대선일정 등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9월말까지 개최는 무산
    - \* “도저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마주앉을 초보적인 명분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”(8.23, 외무성 대변인)고 주장한데 이어,
    - \* 우리의 핵물질 관련 시험에 대해 “남조선비밀핵실험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에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”(9.16, 외무성 대변인)이라고 언급
    - \* 북한 최수헌 외무부상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, “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파괴한 회담이 기초를 다시 세우고, 한국의 비밀핵물질 실험이 완전히 규명되어야 한다.”고 주장(9.27)

## □ 추진방향

- 정부는 긴밀한 한·미·일 공조 및 중·러와의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.
  - 6자회담 참가국간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,
  -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가급적 조기에 제4차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또한, 남북대화 재개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.

### 3. 개성공단 건설사업

##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개성시 일대
- 면 적 : 총 2,000만평(65.7km<sup>2</sup>), 공단 800만평, 배후도시 1,200만평
- 단계별 개발계획 : 3차에 걸쳐 개발
  -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8천평을 조성, 연내 입주를 추진중에 있으며,
  - 나머지 1,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.

#### □ 시범단지 입주준비 및 지원 현황

-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심사판정이 마무리된 11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.(9월 8일, 9월 17일)
  -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반출물자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11개 기업은 공장건설 등 입주절차를 진행, 일부기업들은 금년내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- 전략물자 판정의 경우,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우리 내부의 통제체제 구축, 관계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무난히 해결 되어 가고 있습니다.
  - \* 산자부 산하 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를 새로이 발족하는 등 전략물자 심사체제 구축

- 특히, 통일부장관 訪美(8.30~9.3) 이후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이해와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- 1단계 100만평은 우리 내부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큰 애로사항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.
- o 입주기업의 선정 및 투자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
  - 먼저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은 의류, 봉제, 신발, 기계, 전자, 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선정되어 Pilot Project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적의 조합으로 평가됩니다.
  - 또한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총투자금액은 760여억원으로서, 이는 '95년 이후 10년간 대북 총투자금액(금강산,경수로 제외)의 1.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.
  - 1단계 100만평 개발이 본격화되는 2006년 하반기에는 투자규모가 3억불 이상(300여 기업)될 것으로 보며, 개성공단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교두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## □ 향후 추진방향

- o 우선 정부는 시범단지에서 금년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- o 아울러 관리기관 및 지원단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함.
  - 정부차원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관리기관은 10월중 개성현지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입니다.
- o 앞으로 통신공급과 관련한 대북협상,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 당면 과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## 4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
### □ 현 황

#### 1. 기본방향

-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원칙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- ▲남한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, ▲국내입국 탈북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유도, ▲탈북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·남북경협 병행

#### 2. 보호 및 정착지원

-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
  - 외교채널을 통해 강제복송 방지 등을 해당국에 요청, 협조하고,
- 국내입국한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
  - ① 하나원에서 2개월간 우리사회 이해, 심리안정, 기초직업 훈련 등 사회적응교육 실시
  - ② 정착금 지급, 주거 제공, 학비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, 생계·의료급여 등 정착지원
  - ③ 거주지·취업·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거주지에서의 적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## 3. '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'(7.23)

- 정착금에 인센티브 도입, 생계급여 특례 폐지, 정착도우미제 도입,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등 확정하였습니다.
  - 현재 정착금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 개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.

## □ 추진방향

○ 국내입국 및 거주 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「북한 이탈주민 종합대책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.

-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, 시행해 나갈 예정

\* 음년 8월말 현재 1,399명이 입국하는 등 최근 입국·국내거주 규모 증가

○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 강화를 위해

- 해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적 관계를 강화하고,

○ 국내입국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

- ①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 연장(현행 2개월→3개월)로 연장 및 취업 연계, 정체성 확립 등 내용개선 추진

- ② '자립·자활' 유도를 위한 직업훈련 효율화, 특별학급 등 취학·취업 지원 강화

- ③ 노령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

\* 최근 높은 실업률·학업중도탈락율 등 탈북자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응교육 개선,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

○ 또한, 효율적인 거주지 관리를 위해

-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집행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,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 참여의 확대 등을 통해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



## 5. 경수로사업 추진

### □ 현 황

-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대두로 KEDO 집행이사회는 1년간 경수로사업 「일시중단」을 결정(2003.11)하면서
  - 사업장래문제는 중단기간 만료(2004.11.30)전 집행이사국 간 협의·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
- 집행이사국간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호·관리 조치를 실시중입니다.
  - 부지현장 및 기자재에 대해 품질보장원칙(안전성)과 비용최소화원칙(경제성)에 따라 보존·관리조치를 시행하고,
  - 부지 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 및 품질보증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중단기간중 북한과의 대북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  - 「양해각서」 체결(2004.3)에 따라 체류인원의 신변안전·의정서 준수 등 협조관계는 유지, 장비반출금지조치는 미해결 상태

### □ 추진방향

- 사업장래에 대해 정부는 기투입비용(15.2억불),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, 경수로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
  - 북핵문제가 중단기간 만료(2004.11.30)전까지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경수로사업의 「중단연장」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중단기간 중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.

## 6. 남북철도·도로 연결사업

### □ 현 황

-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올 10월 도로 개통 및 철도 시험운행(개성-문산, 온정리-통일전망대)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

#### 《남북 철도·도로연결 공사 현황》

(2004. 9월 현재)

구 분	우 리 측			북 측	
	구 간	추 진 현 황		구 간	추 진 현 황
경의선	철 도	12km	○ 공사 완료('02.12.31)	15.3km	○ 본선 궤도부설 완료
	도 로	5.1km	○ 공사 완료('03.10.31)	7km	○ 포장공사 완료
동해선	철 도	7km	○ 궤도부설공사중(36%)	18.5km	○ 본선 궤도부설 완료
	도 로	4.2km	○ 포장공사(100%)	20km	○ 포장공사 완료

### □ 추진방향

- 도로의 개통은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인원과 물자의 수송,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며,
  - 남북간 직교역로 확보로 인해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, 민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.
- 철도의 경우 2005년말 전구간 정식 개통 이전 현재 시공된 연결 구간(개성-문산, 온정리-통일전망대)의 기술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수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.
  -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이후 역내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, 동 사업을 “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” 실현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
  - 앞으로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 관련 논의가 관계국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## 7. 금강산 관광사업

### □ 현 황

- 작년 9월이후 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금년 11월까지 육로관광 예약이 완료되는 등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.
  - 당일관광, 1박 2일 관광, 2박 3일 관광 등의 관광 상품도 다양화
    - \* 1998년 11월 이후 76만명이 관광하였으며, 2004년 7월부터 월 3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.
- 북한이 특구개발을 위한 하위규정을 추가로 발표(2004.5.26, 5.29)함으로써 금강산 특구개발을 위한 여건도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.
  - 현재 사업자가 특구개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, 확정되는 대로 북측과 협의하여 특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    - \* 8개 하위규정 : 「개발」, 「기업창설」, 「지구관리기관 설립·운영」, 「세관」, 「출입·체류·거주」, 「노동」, 「외화관리」, 「광고」 등
    - \* 미발표(2개) : 「부동산」, 「회계규정」

### □ 추진방향

-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게 개발하도록 하되, 금강산 지역이 평화체험의 장이자 동북아시아 번영을 위한 동해 성장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.
- 금강산특구종합개발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8. 대북 인도적 지원

### □ 현 황

- 정부차원에서는 대북 직접지원과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참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- 직접지원은 북한주민의 만성적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및 비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
    - \* 식량은 차관방식으로 매년 30~40만톤 지원(올해 지원분 40만톤 전달중)
    - \* 비료는 매년 20~30만톤 무상 지원(올해 20만톤 지원)
  -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식량·보건의료·어린이 지원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UNICEF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지원(100만불), WHO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(67만불)
-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·비료 지원시 포장에 「대한민국」, 「대한적십자사」 표기를 사용하도록 하며, 북측의 분배결과 통보, 쌀의 경우 매 10만톤 마다 동·서해지역 한 곳 이상에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- 한편, 국제기구는 100여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북한에 상주시켜 분배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206개중 163개 시·군에 모니터링 가능

### □ 추진방향

- 민·관협의체인 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」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할 계획입니다.
  -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·의료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,
  - 민간분야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 구도하에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.

## 9. 사회문화교류 추진

### □ 현 황

- 올해 상반기에는 방송·종교·학술·체육·예술·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.
  - 특히, 5.1노동절, 6.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등 남북공동행사는 정례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    - \* 남북공동행사는 지난해까지 방북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, 올해는 방남 행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(6.15우리민족대회 등 5건 개최)
- 그러나 7월 들어 조문 문제, 탈북자의 집단 입국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측이 민간 교류·지원사업의 일정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.
  - 다만,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(7.11~16, 금강산) 및 남북교육자통일대회(7.18~20, 금강산) 등은 일정대로 추진되었고,
  - 금강산 지역에서 학술·문화교류 행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, 인도적 지원물자 등이 개성, 금강산, 남포로 전달되고 있습니다.

### □ 추진방향

- 민간의 다양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되, 질서있게 추진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- 남북장관급회담에서 「사회문화분과위원회」의 구성·운영에 합의함으로써,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□